

ETC  
자결권  
주한미군

미군기지 반환운동(2)

SAC.b.5

대·중·운·동·의·현·황·점·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20	12

대/중/운/동/의/현/황/점/검/2

## 부산미군기지반환투쟁

### 운동의 성격에 맞게 참신한 방법으로

안 호 국  
한청협 정책위원

「상호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대한민국정부와 미 합중국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2항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미군당국을 대신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미군기지의 땅이 사유지인 경우 국가는 이 토지를 징발하고 보상해주어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제5조 2항

...

전국에 있는 120여개의 주한미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에 맞먹는 3백여km<sup>2</sup>에 이른다. 이들 미군기지는 사유지(2천247만평), 국유지(8,300만평)에 대한 연간임차료 24억 달러를 한푼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손꼽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과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주둔에 따른 현금 2억8천만달러(1천760억원)를 포함하여 연간 총 주둔분담액 30억7천만달러(2조4천560억원)를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따지지 않

더라도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민족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으로 되고 있다. 해방후 미국은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민족의 열망을 짓밟았으며 4.19, 80년광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역사적 전진을 독재자의 편에 서서 가로막아왔다.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군을 해방의 은인으로,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게 되고 이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적극적인 반미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에 의한 부당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반미투쟁은 대중적인 반미의식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활발히 펼쳐진 반미투쟁은 대중들 속에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이상의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다. 주한미군은 아직도 무수한 고통과 손실을 강요하면서 이 땅에 주둔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군사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미국에 의해 짓밟힌 민족자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활동 중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고양된 반미감정으로 형성된 여론의 힘을 앞세운 이 운동은 90년 6월 주한미군측과 용산기지지전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에 기댄 미군의 부당한 요구와 정부의 대미굴종적 자세는 이전 비용전액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도록 합의하여 앞날을 어둡게 하였다. 이후 미국은 91년에 17억달러(당시 1조8천억원)로 요구했던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92년도에 95억달러(7조6천억원)을 올려 요구하여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를 만들었다. 이후 정부는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자 이전비용과 현지주민 반발을 이유로 들며 이전을 무기연기하였고 토지매입사업도 전면취소하였다. 결국 용산미군기지 반환투쟁은 그 일부를 용산가족공원으로 꾸미는 데서 그치고 말았다.

미군기지반환투쟁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과 고통만으로 보아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의로 말한다면 그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

요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120여개에 이르는 미군기지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초법적 지위와 온갖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부산 미군기지반환투쟁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하야리아 땅 되찾기 운동」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투쟁이 작지만 의의 있는 성과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도 있지만 활동 방식과 내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반환투쟁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1년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당시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과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연합회의 공동명의로 「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를 그해 9월에 발간한 것이 이 지역에서 미군기지문제에 대한 첫 공개적 활동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책은 지역의 여러부문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미군부대

가 부산지역에서 놓고있는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연구한 내용을 모아 합법적 출판물로 발간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지역의 미군문제를 직접 다룬 내용을 합법출판물로 낸 이 책은 지역의 미군기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결론에 충분히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미군기지가 지역에 놓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 미군기지와 관련한 다른 일로는 93년 하야리아부대가 있는 부산진구 의회의원 9명이 하야리아부대이전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회성사건으로 그치고 말았다.

94년에 들어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에서는 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한 대책활동을 펼칠 것을 결정하고 4명으로 이루어진 미군기지반환연구소위를 꾸렸다. 소위는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94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부산연합에서는 대책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를 구성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적지 않게 겪었다. 대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94년 11월 23일 부산연합은 대책활동 기구 구성의 전단계로 환경운동연합 등 몇개 단체와 공동주최한 토론회 「하야리아부대반환과 활용방안」를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참가한 단체들과 논의하여 대책위를 결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부산연합에서는 95년 초 지역단체들에 대책위 구성과 참가를 제안하였고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95년 3월 6일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우선 격주로 정기적인 선전작업을 벌여 나가고 부산시의 참여를 건인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초까지 5차례에 걸친 시민선전전을 벌였으며 4월 24일 '부산땅 하야리아를 어떻게?' 라는 주제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부산땅 하야리아의 조속한 반환과 활용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6월에 부산시장, 대통령,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장관, 당시 부산시장 후보 2명 앞으로 하야리아부

대문제 처리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하였으며 부산진구 기초 광역후보자들에게 하야리아부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연명선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선거운동기간중 부산진구청장 후보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후보들로부터 일정한 공약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대책위는 8·15민족공동행사 부산준비위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일 민족통일 해원상생국과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회를 열었다.

부산미군기지반환투쟁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몇가지 의의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하나는 지역의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상설적 대책기구를 결성한 것이다. 대책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과 가입단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부산본부와 가입단체 뿐만아니라 천주교사회선교연합, 기독교교회협의회, 늘푸른남구시민모임,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산시민연대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당부산시지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의 다른 하나는 하야리아부대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였다는 데 있다. 미군기지문제는 그간 지역 언론 등에서 간헐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흐름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책활동의 결과 시민들속에서 미군기지가 지역에서 낳고 있는 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아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장에 함께 하기에 이르렀다.

또다른 성과는 하야리아부대 부지 활용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발전시킨 데 있다. 대책위 활동이전에는 하야리아부대 부지활용안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계획이 있었을 뿐이다. 대책위는 활동에 들어간 초기부터 시에서 내놓고 있는 부지활용방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를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체를 대규모 아파트부지로 사용하려는 시에 맞서 활용방안을 시민휴식공간, 녹지공간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시에서 비밀리에 수립하고 있던 부지 활용방안을 공개적

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시는 대책위의 완강한 활동과 여론의 힘에 밀려 부분적인 양보를 거듭하여 6월 초에 이르러서 전체 17만평중 12만평은 공원으로, 5만평은 아시안경기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이 이렇게 꾸준히 착실한 성과를 쌓고 있는 것은 대중운동이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군기지반환투쟁을 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 즉 지역주민 모두가 미군기지때문에 겪는 공통적인 생활적인 문제로 부터 접근해 나간 데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국의 어떤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또한 생활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미군기지반환투쟁의 대중적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부산지역에서만 시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군기지문제에 접근해온 방식의 대부분은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폭로·선전하고 이에 의해 형성된 반미감정에 기초하여 미군철수라는 정치적 요구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해방의 은인, 남침을 막는 믿음직한 방패, 민주화 운동의 지지자, 꿈과 풍요의 나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한 일이긴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미군기지에 대한 대책활동을 대중적으로 벌이는 초기에는 구체적 활동들에 반미자주의 원칙적 계선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대책활동 자체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펼치는 것은 형성된 대중적 반미감정이 당면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이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힘있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

미군이 이 땅에서 50년 가까이 누리는 절대적 지위와 권리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풍습으로까지 되어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과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고서는 미군철수라는 정치적 구호만을 내거는 것은 미군기지문제가 우연적인 사건이나 자연발생적인 흐름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80년 이후 거듭된 반미투쟁에 의해 형성된 대중적 반미감정이 힘있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각이한 사람들의 절실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군기지 문제는 사람들이 처한 계급, 계층적 처지에 따라 여러형태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특이한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 매개 사람들이 미군기지로 인해 겪는 고통과 손실은 처한 형편에 따라 한결같지 않은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반미투쟁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이 자기운명문제와 바로 잇닿아 있으며 자신과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공통된 감정과 정서는 형성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실

제 행동으로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산의 미군기지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이 어려움을 겪거나 기형화 왜곡되고 있지만 부산지역의 문제는 부산시의 일부지역문제가 아니라 시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는 미하야리아부대, 미55보급창, 미문화원, 그리고 8부두의 미군전용부두 등의 미군기지가 있다. 200여명에 불과한 미군이 16만5천여평을 차지하고 있는 하야리아 부대는 한국전쟁당시 전쟁물자의 군수기지로서 설치되었다. 하야리아부대는 부산의 교통량의 대부분이 통과해야 하는 서면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의 교통난은 전국에서 제일 심한 정도이며 특히 서면일대는 거의 하루종일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는 곳이다.

7만4천여평에 달하는 미55보급창은 전쟁물자의 하치장으로서는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현재 유휴지처럼 방치되어 있다. 부산항

이 부산경제와 도시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 힘들다. 그런데 부산항은 물동량이 하역능력을 초과하여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로 하역적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미군전용부두는 제8부두의 2만여평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연간 2백만톤의 하역이 가능한 부두시설을 한 해에 12만톤에 불과한 하역을 하면서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상가요지인 대청동 400여평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 미문화원은 이 지역의 상권형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미군기지문제는 지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반환운동은 지역의 이러한 실정을 잘 감안하여 생활적인 문제로부터 접근을 시작하였다. 부산의 미군기지반환운동은 지역의 교통난, 시민휴식공간의 절대적 부족 등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미군기지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였다. 또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이들 시설



을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밝혀나갔다.

이와같은 방식의 활동은 지역의 언론으로 하여 대책위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지역의 중간단체와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이 운동을 지지하게 하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미군기지문제를 여론화하는데 성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두번째로 부산의 미군기지방환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해온데 있다.

부산의 미군기지방환운동은 대규모 군중집회, 단체회원을 동원한 행사, 유인물배포, 서명작업 등 기존의 활동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였다. 서면과 부산역에서 진행한 1, 2차 선전전은 대형여론조사판을 만들어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였다. 5월5일 펼쳐진 4차 선전전은 그날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시민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많이 오는 초읍어린이 공원에서 펼쳤다. 행사는 판긋을 벌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개사곡 부르

기등을 진행하여 찾아온 그날 장소에 나온 시민들의 정서에 맞추어 큰 부담없이 대책위의 선전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5차 선전전은 야구경기가 벌어지는 날 사직 야구장에 나가 하야리이부대반환을 요구하는 구호를 인쇄한 응원용막대 풍선 나눠주고 서명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몇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대중선전교양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사업과 투쟁에서 깨닫게 해주는 바가 적지않은 것이다. 대책위가 펼친 참신한 방식은 대책위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여 대책위의 활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이런 방식의 활동을 통해 더욱 광범한 시민들과 접촉하는 속에서 대중투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새로운 대중활동방식을 더 내올 수 있는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방환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는 그외에도 계기적 사안을 잘 활용한 것, 기존의 방식을 적절해 배합한 것, 일꾼들의

창의와 열성을 앞세워 부딪친 난관을 해결한 것 등에도 있다.

대책위에서는 지자제선거국면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장후보들에게 하야리아부대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6월 16일에는 하야리아부대문제와 관련한 부산진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당연히 당시의 관심사와 맞물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정부와 시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지활용방안의 문제점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시가 기존의 부지활용방안의 상당한 부분을 철회하는 성과를 올리게 하였다. 대책위는 이런 활동들에 의해 여론이 일정하게 형성된 것에 기초하여 7월초에는 시민대회형식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응원용 풍선을 확보할 재정이 부족한 문제는 기업으로 부터 물건을 협찬받아 일꾼들이 밤새워 기존인쇄를 지우고 구호를 다시 인쇄하여 해결하는 등 어려운 문제에 걸릴 때는 일꾼들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

이와같이 지역의 특성에 잘 기초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기지반환투쟁의 성격에 잘 맞추어 진행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민족자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쳐야 하고 주한미군과 관련한 활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부산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은 그 시작이 순탄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전망도 매우 불투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악조건과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나가며 작지만 의의있는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아무리 복잡한 투쟁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운동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택한다면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이제까지 활동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역운동의 사례로 반

미주화운동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시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하나의 사안을 통해 표현하고 높였다는 것이며 세째로는 폭넓고 일상적인 사업본부로서 위상을 갖춘 대책위를 구성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국적 모범사례로 되는 투쟁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활동에서 부족점과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초기에 사업 방향을 분명히 잡지 못하여 부지활용방안에 매달림으로써 현행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협정의 테두리속에서 문제를 대한 약점이 나타나기도 한 점,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의 결속력과 참여도에 차이가 있어 일부 단체에 사업의 부담이 집중된 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홍보용책자발간 등 계획한 몇몇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대책위의 목표는 하야리부대를 시민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책위에서는 이 목표는 한두해사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며 결국 차기 정부에 가서야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활동을 통해

일꾼들은 미군기지반환투쟁이 지역적 사안, 생활적 문제에서 접근해가 되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과 미군기지문제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데로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미군기지를 반환받거나 이전시킨다고 하여 그것이 곧 민족의 자주권이 바로서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어떤 형태로건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땅에 진주한 미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만 이루어 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미군은 스스로 이 땅에서 물러나지는 않으며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소리높여 외친다고 하여 물러날 리도 없다. 감당하기 힘든 민족 전체의 저항에 직면하거나 저들이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얻은 이득보다 부담과 손실이 더 큰 경우에만 물러날 것이다. 우리는 전자의 경로를 계속 견지해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

로를 통해 실질적인 미군철수를 이  
록해 내는데도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화해와 수교분위  
가 무르익은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변화되고 있는 정세는 후자의 경로  
에 더 큰 의의를 가지게 한다. 미국  
이 해외주둔군을 유지하기에 날이  
갈수록 힘에 겨워하는 상황은 우리  
가 이 땅에서 미군이 누리고 있는 특  
혜적 지위를 박탈하고 정당한 비용  
을 미국자신이 부담하도록 해나간  
다면 저들은 결국 자신의 병사들을  
자기나라로 데려갈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현시기  
미군기지반환투쟁은 민족자주화투  
쟁의 중요한 투쟁과제로 나서고 있  
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배와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투쟁이건 일제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재침의  
도를 분쇄하는 운동이건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투쟁은 민족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절대적 원칙이며 승리의 비  
결이다. 여기에는 민족민주운동  
의 전체역량과 양심적인 인

사 뿐만 아니라 중간단체와 개  
별인사들을 포괄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관련단체와 정부일  
각까지도 이 활동을 지지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방식과  
내용이 완전히 새롭고 적극적  
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기간 전투적이며 헌신적  
인 투쟁속에 살아온 것으로 하  
여 이러한 방식을 개발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쌓지 못했으며  
이런 방식의 활동을 펼치는데  
아직 서툰 부분이 적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반환투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시사점  
을 많이 남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더욱 새롭고 활기찬 방식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어려움과 부족점도 없지 않  
지만 이제까지의 성과에 기초  
하여 더욱 힘있게 활동을 펼  
쳐 나간다면 '하야리아 땅 되  
찾기 시민대책위원회'를 중  
심으로한 부산지역의 미군기  
지반환투쟁은 반드시 의의  
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주의길

부기종	비
B20	10

##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의 법적 검토결과

2월 중순경 시민모임에서 운동본부에 요청하신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2월 24일 저녁 본 단체의 사무실 (한국기독교교회관 307호)에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의 이장희 위원장(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최승환위원(경희대 법학과 교수) 장주영위원(변호사) 그리고 운동본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군측이 민항기의 군산공항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합니다.
2. 미군측은 군산공항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만큼의 액수를 한국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빼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에는 어마 시설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도표

도표	지원합의액제 (전년도대비 10%증액)	현금지원 (인건비+군사건설)	현금 지원비율	공동사업 지원비율	공동사업 군수지원/CDIP
'96	3.3억불	2.2억불	67%	33%	6천만불/5천만불
'97	3.63억불	2.58억불	71%	29%	6천만불/4천5백만불
'98	3.99억불	2.99억불	75%	25%	6천만불/4천만불

CDIP :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위의 도표는 96년부터 98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3월1일과 7월1일 1년에 두번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전체액수는 현금지원(달러지불)과 공동사업지원(현물과 서비스)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이 방위비분담금에는 시설유지비와 보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 시설개선과 유지비란 명목으로 두번이나 부과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만약 미군측이 '너희가 군산공항을 지을때 돈을 냈나? 우리가 지은 시설을 너희가 이용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들린 이야기입니다.

군산공항 지을때에 한국측이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국측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1년 이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한미행정협정 조항의 적용으로 미군측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지 때문입니다.

### 한미행정협정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미국)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군이 부담한다.
2.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비행장/항만 등 각종시설/구역을 제공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 한미행정협정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한국안의 시설,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위와 같은 조항으로 토지와 시설을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안에 필요시설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했던 것이 맞습니다.

91년 2월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 부탁하신 합의각서 검토는 다른 정보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더 자세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찾아 보겠습니다만 군산에서도 살펴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70년 맺었던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군산공군기지 시설의 대한항공 사용에 관한 협정
2. 군산공항은 누가 시었고, 92년 군산공항 합의각서 체결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3. 방위비분담금의 정확한 내역...
4. 시설개선비의 유지비, 비행기 이착륙때마다 계산되어 받은 돈을 미공군측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5. 위의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에 시민모임과 군산시가 공동으로 질의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명서

## 군산미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에 대한 시민모임의 입장

군산시민들은 지난 8월부터 군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개정에 있어 미군측의 언상요구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이유는 1)미군측의 착륙비라 명칭되

는 사용료는 무상임대된 땅에 대한 이윤행위이며 2)지난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협정에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 파기하게 되어 천파운드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로인한 3배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3)우리한국국민은 매해 \$4억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둔군지원경비란 명목으로 미군측에 지불해왔으며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기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출되기에 민항관련 지출비용과 주둔군지원경비는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하에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전국 1억여평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임대해주었다. 이 한국땅에 대해 한국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그리고 20주간 이어지는 금요시위 총 4차례의 시민집회 등을 통해 우리군산시민은 민족자존심을 세우기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중점 사항인 착륙비의 문제는 기존의 1천파운드당 \$0.6에서 협정만료일 2003년까지는 \$1.7까지 점진인상에 합의하기로 한 국방부-미군간의 합의안을 접하고,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미군측의 부당한 300x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해 완전한 인상실회는 아니었지만 점진적인 인상합의결과는 군산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에 의한 성과임을 밝힌다. 분단상황과 안보를 이유로 침묵이 강요되는 한미간의 불평등 구조속에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대응함은 한미관계의 불평등구조의 개선을 위한 일보선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1)한국땅을 무료로 쓰는 미군들이 한국국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당함과 2)주둔군지원경비등에서 중복지출되는 점 그리고 착륙료와 유지보수비의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공개 3)한국내 영토에서 미국내 규정(AIP10-1101)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폐단과 오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후 이에 대한 시민과 한국정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뒷면 계속)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양임  
한국에서 다시 받고 이유  
140명.

시민모임은 이번 인상안을 계기로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길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1)군산시가 미군쓰레기처리와 응수비용을 인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시민모임은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위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예로 쓰레기 수거-매립-침출수관리(30년)와 인건비를 계산하여 미군측에 적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거에 포함되는 비용(공무원인건비제외)만을 받고 있다. 이는 평생을 한국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과 차이없이 받는다 함은 미군에 대한 사대적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군산시가 미군측에 대한 적정액을 산출하여 징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0여년간을 90db-130db라는 극심한 소음속에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에게 정부와 미군측의 더 이상의 외면은 최악임을 밝힌다.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서 말없이 고통을 견뎌내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한 치료와 보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군산시의 공동소음피해실태 조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모임은 인상안 철회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과정과 결과에 있어 단합된 군산시민의 의지를 모았다는 점과 부당함으로 점철된 현미관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시민저항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군기지라는 큰 벽에 억눌려 지금까지 민족자존심이나, 국민주권의 문제, 더욱이 주민복지의 문제를 외면해온 지난시기에 대해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군산미군기지에 대한 감시 및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1998년 3월 5일 군산미군기지 정문앞에서

**미군기지면항사용료인상안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문정현신부, 오충일 목사, 문재곤스님**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사랑청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군산인권위원회  
군산YMCA 군산YWCA 군산청년회의소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민주노동총연북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민중사랑실천연합 불교신도연합 새시대노동자회  
새정치국민회의군산을지구당 푸른군산생활협동조합 (사)자연보호협의회군산시지부  
전교조군산지회 전북여성운동연합 전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교우회 청학야학교 평화정보센터(총22개 단체)



( 건교부항공국의 보도자료 )

## 보도자료

주관부서 항공국 남당자 항공정책과장 이재몽 전화번호 500-4166

### 제목 군산비행장 민항기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 시행

○ 국방부/건교부 및 주한미군 (미7공군)은 금년 3월7일부로 종료되는 군산비행장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개정, 체결하여 향후 5년 ('98.3.7~'03.3.6)동안 새롭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동 합의각서는 SOFA합동위원회승인후 발효될 예정이다.

○ 금번 합의된 양국간 주요 개정사항은 민항기의 운항횟수 증편(일일 4편 >10편) 및 운항기종 확대 (소형기→중/소형기), 야간주기허용 및 착륙료 점진 인상등이며, 이러한 금번 조치로 군산/ 전북지역 수반의 항공교통 편익이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편, 군산지역 시민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착륙비 인상문제는 미 공군규정(AFI10-1001)기준에 의한 일괄인상요청에 대해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물가상승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만을 주장한 한측 요구를 미측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최종 타결될 수 있었다.

○ 미공군 비행장에 운항하고 있는 민항기 착륙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기준 (본토 미공군기지 : 1.5\$/1000LBS, 해외 미공군기지 : 1.7\$/1000LBS)으로 전투기 대비중량이 무거운 민항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활주로 파손을 일상유지 보수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 군산비행장 착륙료 조정계획

기준요율 인상

단위 : \$

년도	현행	'98	'99	'00	'01	'02	비고
비용	0.6	0.6	0.8	1.1	1.4	1.7	최내이륙중량1000LBS당

민항사별 군산비행장 취항기종 적용 "예"

단위 : \$

항공사	현행	'98	'99	'00	'01	'02	비고
대한항공 (F-100)	60	59	78	108	137	167	98,000LBS
아시아나 (B737-500)	60	69	92	126	161	195	115,000LBS
아시아나 (B737-400)	60	86	114	157	200	242	142,000LBS

<자료집 >

원권 자료실	
문기호	자료번호
	43

# 전국미군기지 1차 환경조사 보고회

일시 : 1996년 12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호

주최 :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녹색연합

(참가지역 : 서울, 대구, 부산, 하남, 군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춘천,  
원주, 인천)

## 보고대회순서

사회 : 심성구(<우리땅용산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개 회 ----- 사 회 자

애국의례 ----- 다 같 이

인 사 말 ----- 장 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미군기지환경조사결과보고 ----- 이 현 철  
(<녹색연합> 정책팀)

법적 검토 ----- 성 재 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

질의응답 ----- 각 언론사/조사 팀

성명서 발표 ----- 김 용 한  
(문학박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준)>)

폐회선언 ----- 사 회 자

#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이 현 철

<녹색연합> 정책기획팀

## I. 들어가며

강도를 막기 위한다며 옆집의 힘센 남자를 안방에 모셔두고 밥도 주고 돈도 주는 집이 있다. 그런데 그 옆집 남자가 딸을 겁탈해도, 아들을 구타해도, 안방 한 가운데 담배재를 마구 버리고 쓰레기를 뿌리고 다녀도, 강도를 막으려면 그 남자를 계속 모셔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남자들과 정부 관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6개의 미군 관련 기지와 시설들이 있다. 확인된 땅 면적으로만 7천3백60만평인데, 확인되지 않은 공여지를 포함한다면 미군 관련 토지의 면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공식 자료로만 해도 미군기지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2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나 된다. 이번에 우리 「우리땅미군기지퇴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와 「녹색연합」은 공동으로 전국을 누비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땅이었기에 간접적으로밖에 조사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간접적이라고 해서 조사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번 미군기지 환경 조사 결과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환경이 현재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며 참고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이번 조사는 앞으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 오염을 측정하고 관련된 한미 협정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 미군기지에 대한 좀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환경 조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II. 환경조사 방법에 대하여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생태적 차원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오염원과 오염물질에 대한 간접조사만으로는 지역 오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없으며, 오염원에 대한 직접조사는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할 수 있기에 우리의 과제로 남긴다. 이 조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 수치에 큰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삼은 미군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부평, 서울, 평택, 부산, 대구, 군산, 원주, 춘천, 하남 등 총 11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0여개의 미군기지이다.

### 2. 조사 내용

조사는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조사, 소음 측정을 중심으로 하되, 가능한 지역에서는 3가

지 모두를 했으며,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위 항목 중 일부분만 진행했다.

### 3. 조사 방법

조사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실시했으며, 항공기와 작업장의 소음은 현장을 다 소 벗어난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의 골목과 집 마당에서 측정했다. 이유는 주민들이 소음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수질조사는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배출구(우수관 또는 하수관)에서 직접 취수했고, 그 동안의 한·미 관계에 따라 조사원이 오염원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통 기지를 통과하는 하천수일 경우에는 하천수를, 기지 밖의 하천수로 배수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배수관에서 직접 취수했다.

토양의 경우 의정부에 있는 캠프 인디안(Camp Indian)의 경우 방치된 기지 안에서 토양을 채취했고, 그 외의 경우는 기지와 미군 시설에 의한 오염 가능 지역을 간접 조사했다.

### III. 환경조사 보고서

#### 1. 소음측정 종합보고

단위 : dB(A)

측정장소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소음원	비고 (순간 최고소음)
의정부 (camp stanley)	74.0	78.4	헬기소음	81.4
춘천	71.1	82.0	헬기소음	89.3
인천	63.9	68.8	공장가동소음	68.8
평택	81.4	96.0	제트기소음	112.0
군산	83.6	94.0	제트기소음	107.0
대구	87.8	99.2	제트기소음	118.3
	81.2	87.4	헬기소음	88.2
부산	66.7	78.4	장비가동소음	78.6

환경소음 기준치<sup>1)</sup>

단위:Leq dB(A)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주거지구,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	50	40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45
도로변지역	일반지역과 동일	65	55

<sup>1)</sup>소음진동학,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5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sup>2)</sup>

소음도(dB)	소음수준	영향
60	탈수기 작동	식욕감퇴.수면장애
70	육조 물받는 소리	혈압상승.집중력저하
75	오토바이 소음	원활한대화.전화통화 불가능
80	고양이 울음	소화불량.피로감.불쾌감
85	피아노 소음	심장기능저하.평형력 교란
90	개짖는 소리	청력장애.귀울림.두통

2.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 보고

단위 : mg/kg

지 역	유기물 함량	유류 기준	비고
포항 (1)	510	불검출	유기물중대부분 유류
포항 (2)	250	불검출	유기물중대부분 유류
포항 (3)	45	불검출	유기물
평택	110	불검출	유기물 중 2/3 유류
의정부	160	불검출	유기물 중 2/3 유류

※ 기준 : 농경지 -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하천, 체육용지

### 3. 지역별 평가

#### 1) 의정부

미군기지: 총 8개

기지명	위치	성격	비고
CAMP RED CLOUD	가능동	미 2사단 사령부	면적 약 32만평-38만평 으로 추정
CAMP LA GUARDIA	의정부2동, 가능동	공병대. 1개중대(120-150명)	
CAMP STANLEY	용현동(퇴계로변)	A38 포병대대 미 2사단 항공대대(여단) 미 2사단 포병사령부	
CAMP SEARS	금오동	702(MSB)중대 미사일 정비부대(1개중대)	
CAMP ESSAYONG	금오동(금신로변)	102MI 2대대(정보부대)	
CAMP KYLE	금오동	61 정비중대( 구 38병 기중대)	
CAMP JACKSON	호원동	하사관 교육대	
CAMP FALLING WATER	의정부동, 의정부역 앞	시설공병대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5.5	1 이하
총질소	4.9	1 이하
총인	0.011	0.100 이하
부유물질	24	15 이하
계면활성제	0.02	0.5 이하

의정부에 속한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하천수는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태이다. 특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총질소는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하며, 부유물질은 두배가 많다. 그럼에도 이 하천수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의정부에는 경우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미군 시설과 담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편도 2차선 도로가 한쪽에 있다. 이 지역의 헬기부대에 의한 소음의 등가소음은 74.0dB로 사람으로 하여금 혈압상승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정도의 소음이다. 이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주둔한 기지로 장기간에 걸친 소음으로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크며,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 지역의 부대에서 나오는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질소 등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 했으며, 이 지역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의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의정부시 중심과 역 앞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음으로 정상적인 도시계획이 불가능하며, 심각한 교통체증과 녹지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부에 있는 CAMP INDIAN의 경우 미군부대가 철수한지 5년이 넘었지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어 있으며, 막사로 사용한 건축물을 방치하면서 건축 단열재로 쓰였던 석면도 그대로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폐안으로 흡입된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악명높은 질환을 유발시킨다.<sup>3)</sup>

이 지역에 대한 토양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유기물이 검출되었으며, 이 유기물중 2/3이 유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길사, 1991

폐 안으로 흡입된 석면은 석면소체가되어 폐조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의 악명 높은 질환을 유발시킨다. 또한 세포조직을 죽이고 섬유증을 발생하여 심각한 석면폐를 만든다. 그럼에도 석면 질병의 특징은 대개 잠복기가 20-40년이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질병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경우 가족에 까지 석면에 의한 질병을 발생시킬수 있다.

## 2) 춘천

도시와 춘천역 사이에 미군 헬기부대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헬기장은 담을 사이로 한쪽엔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근화초등학교가 있다. 이곳 초등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이 어려울 정도이며, 항시 헬기 이착륙과 정비를 위한 시동 등으로 하루종일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의 소음은 등가소음이 71.1dB이며, 최고소음은 82.0dB, 순간 최고 소음은 89.3dB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음으로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의 경우 길게는 30분이상 수업을 중지하는 사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나라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수면장애, 혈압상승, 소화불량, 식욕감퇴,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대는 헬기 부대로 총 5개 중대가 상주하고 있으며, 25-30만평을 미군이 점유하고 있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중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은 확인되지 못했지만 헬기에 사용되는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정비를 통해 나오는 독성 폐기물, 헬기 세척시 발생하는 세제류에 의한 오염 등이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간 점유된 이 지역의 토양은 빠른 시일내에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며, 필리핀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양의 산성화나 납에 의한 중독이 문제화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믿고 있는 지하 군사 시설(확인이 불가능한)이 지하 시설이 있을 경우 지하 시설에 의한 위험성 등에 대해서 미군 당국과 한국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형태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 3)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에는 161만평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이곳은 9명의 미군과 49명의 미군가족과 빵공장, 인쇄공장, 폐차장, 세탁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대한 토양은 직접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폐차시설과 인쇄공장에 의한 토양오염과 이를 통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

이곳은 부평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으며, 환경조사단이 조사활동을 하는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부대 가운데 철책으로 통제된 구역이 있었으며, 이곳은 비정기적으로 웅덩이를 파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 대한 과학적인 토양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곳에 미군장비 폐차시설이 있으며, 그중에는 항공기의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체가 아파트와 1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는 비행기에 대한 해체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비행기 해체시 발생하는 항공유 등이 이곳에 매립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일반적으로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4염화탄소와 3염화에틸렌(TCE)과 기타 용제들이 이곳에 무단 매립될 경우 이지역 주민들을 다발성공수종과 비-호킨스 임파종으로 사망율을 높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지역의 소음은 등가소음이 63.9 dB 최고소음 68.8 dB로 나타났다. 이는 기지내의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아파트 단지내 가정집에서 측정된 수치이다. 이 수치는 아파트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며, 이 소음은 식욕감퇴와 수면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음치이다.

또한 부평지역의 대기오염이 타지역보다 심하다고 할 때에 이 곳에 빵공장, 인쇄공장, 폐차시설 등이 있는 것은 지역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평지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등이 기준을 많이 초과 하였으며, 망간이나 아연 같은 중금속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가 간접조사이고 시기적으로 오염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때 이는 부평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면밀히 조사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평의 부대 벽과 아파트 사이에는 이러한 뜻말이 있다. 『부대 벽으로부터 2m 이내 주차 금지 - 영내 사령관』 이는 영내 미군 사령관이 영의 한국 국민들에게 주차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표현이며, 이는 명백한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18.5	1 이하
총질소	3.7	1 이하
총인	0.228	0.100 이하
부유물질	42	15 이하
계면활성제	0.25	0.5 이하
망간	0.1	기준없음
아연	0.04	기준없음

#### 4) 동두천

동두천의 경우 미군기지는 총 6개 있고, 부대들은 모두 야전부대들이며, 이곳에는 총 8,000~11,000명 정도의 미군병사들이 있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와 식용유 등을 음식 쓰레기 분쇄기를 통하여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홀 짜리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의한 토양과 하천, 지하수 오염등이 예상된다. 미군들이 사용한 폐자재들과 오물들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용역회사에게 일정한 폐기물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부대로 유입되는 식료품이 한국의 방역체계나 관세를 거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수입이 아니다) 음식물중 우리의 생태계와 다른 세균이나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킬수 있는 생물종들이 방역을 거치지 않고 기지내로 들어와 용역이라는 형태로 매립 또는 방치되었을때 외래종에 의한 한국 종의 잠식과 새로운 기생충 등에 의한 질병의 문제들이 예상된다.(초기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경우 미군병사들로부터 문제가 확산된 점)

단적인 예로 동두천의 기지 주변은 귀화식물이라고 할수 있는 외래종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래종들은 번식력이 높아 토종 식물군들의 공간을 잠식하고 그들의 성질에 맞도록 우리 토양의 성질을 변화시키게 된다.

대부분의 기지에서 나오는 하천수들이 그렇듯이 동두천의 경우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부유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의 중금속 오염등이 우려된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을 골프장 공화국이라고 할 때 미군시설인 골프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미군전용 골프장의 수치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없다고 할 때에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골프장의 사용을 미군보다는 지역 한·미 친선 협의회와 같은 민간인이 사용한다고 할때에 지역사회의 공동체 파괴 원인이 되고 있다.

\*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10.0	1 이하
총질소	4.9	1 이하
총인	0.042	0.100 이하
부유물질	26	15 이하
계면활성제	0.03	0.5 이하
망간		기준없음
아연		기준없음

### 5) 평택시

평택시의 경우 미군시설에 의한 환경파괴와 소음에 의한 문제, 지역 공동체 파괴 등 심각한 상황이다.

주거지역 소음은 등가소음이 81.4dB, 최고소음이 112.0 dB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유아들이 경기(驚氣)를 일으킨다거나 외지에서 이사온 어린이들이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이러한 소음은 비행기 이착륙시에 나타나는데, 비행기 이착륙이 일일 15분 간격으로 4대씩있다고 할때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초기 미군비행장이 주둔 할때부터 약 14차례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농지를 불법으로 또는 시가에 1/3 수준으로 미군과 국방부가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것도 있다. 초기 토지 및 주택 매입시 미군은 한 가구당 천막1동, 말뚝2개, 양미2말, 밀가루 2포대로 주민들의 땅을 점유했으며, 이후 토지매입에서 당시 시가의 1/3정도(많은경우 2/3)의 시가에 10년 상환 채권으로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14여 차례 해왔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과 한국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외에 기지경제라고 불리우는 유흥업소에서조차 적용이 되어 유흥업소의 위생검열과 윤락 여성에 대한 위생검열도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군사령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평택시장과 미군사령관의 협정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평택의 항구지천이라고 불리는 하천의 경우 조사된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금속도 일부 발견되었다. 특히 부유물질의 경우 기준치의 10배가 넘으며, 화학적 요구량과 총질소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도를 기록했다. 이는 공업용수로도 쓸수 없는 것이나 이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14.5	1 이하
총질소	19.4	1 이하
총인	0.092	0.100 이하
부유물질	144	15 이하
계면활성제	0.02	0.5 이하
망간	0.07	기준없음
아연	0.02	기준없음

## 6) 원주시

원주시에 주둔한 미군(CAMP LONG)의 경우 기지 주변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어서 지하수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청색증이라고 불리는 병을 유발시킬수 있는 총질소가 검출되었으며, 부유물질도 다량 검출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시내에 있는 부대의 경우 일반적인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할 때에, 도심지 밖의 경우 관리감독의 미비와 환경파괴 행위가 도심지의 부대보다 도심지 밖의 부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지역의 음용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헬기예의 피해도 있으며,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과, 농작물 피해가 있다. 또한 미군들은 건축물폐자제를 이용하여 헬기장을 만들었으며, 이 폐자제 중에는 비닐로 보이는 폐자제도 있었다. 또한 폐자가 된 군용 막사를 10여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미군들이 사용한 건축물 단열제인 석면에 의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과의 문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역은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가 있는데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야산 하나를 파괴하여 하천(폭70여 미터)을 절반정도 매립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지 건축과 증설을 위한 사업에 환경영향평거나 최소한의 환경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올해초까지 7년여 동안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두면서 침출수 등을 방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으며, 이 쓰레기 속에는 미군들의 쓰레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식으로 미군은 불법적으로 쓰레기 매립과 방출을 일삼아 왔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예는 군산의 경우 확연히 들어 난다.

지하수 수질보고서

음용수수질기준1000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0.8	기준없음
총질소	10.3	기준없음
총인	0.005	기준없음
부유물질	24	기준없음
계면활성제	0.01	0.5 이하
망간	0.02	0.3
아연	0.2	1

하천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7.5	1 이하
총질소	3.0	1 이하
총인	0.034	0.100 이하
부유물질	26	15 이하
계면활성제	0.08	0.5 이하
망간	0.28	기준없음
아연	0.06	기준없음

## 7) 군산

군산에는 군산 AIR BASES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800여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확인된 쓰레기 매립장은 3EA이며, 그중 2EA의 경우는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된 매립장의 경우 지역의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새만금으로 표현되는 이지역의 습지 또한 오염시키고 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물품들이 독성폐기물 이거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약품처리로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미군은 한국의 강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지역의 소음도 가공할만 하다. 군산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 83.6dB를 기록하였으며, 항공기 순간 최고 소음은 107.0dB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심장기능을 저하 시킬수 있는 정도의 소음으로 이곳에 미군기지가 해방이후 계속 주둔 하고 있으며, 하루종일 미군 비행기가 이착륙 하면서 30분에 4대씩(더 많은 경우도 있음) 이착륙을 훈련을 하고있다고 할 때 그 피해에 대한 주민건강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미군기지와 일부 민가는 철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음과 공군비행장에서 유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오염물질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년대 중반에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 고용된 민간인들이 다른지역의 민간인들보다 다발성공수종과 비-호킨스 임파종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4) 이지역의 주민들이 미군 기지와 철책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3-40년동안 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미군의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침출수로 흘러 보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미군 활주로를 한국의 국내 비행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쓰레기를 전량 처리해주거나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불합리한 한·미 관계는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안보라는 미명아래 국토의 많은 부분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하천들이 오염됨으로 지역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시키고 있고 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 수질보고서

호소기준(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존 기준)

항목	수치	기준
수온 이온농도(ph)	6.9	6.5-8.5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9.0	10 이하
총질소	0.012	1.5 이하
총인	0.092	0.100 이하
부유물질	110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 할것
계면활성제	0.01	0.5 이하
망간	0.155	기준없음
아연	0.04	기준없음
크롬	0.002	기준없음
구리	0.008	기준없음
세레늄	0.005	기준없음